



여론브리핑 제68호 (2009. 12. 27)

EAI · 중앙선데이 · 한국리서치 12월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체감경제 개선, 소득 계층별 인식 격차도 줄어

2010년 한국경제에 대한 기대감, 빈부격차 사교육비 비관 커

EAI 동아시아연구원 · 중앙선데이 · 한국리서치 공동 12월 정기 여론바로미터조사

EAI 여론분석센터(소장 이내영 고려대)와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 2009년 2월부터 매달 유권자들의 정치사회인식의 분포와 변화를 추적하는 정기 여론바로미터 조사를 실시한다.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에서 국민들의 의사와 선호를 정책결정에 반영하고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 방식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과정이 필수적이다. 매월 20일 전후 넷째 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여론바로미터조사를 통해 민의를 반영한 대의정치와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여론브리핑 제68호 대표집필 : 정한울· 정원철

1. 전년대비 체감경제 개선 조짐 보여, 소득 계층별 인식 격차도 줄어
 - 가정경제 보다 국가경제 개선 폭 커
 - 체감경제 개선이 MB 지지 상승으로 이어져
2. 2010년 전망 : 한국경제 기대감 속 각 분야 전망 밝지 않아
 - 한국경제 개선 기대감, 가정경제 전망은 신중
 - 한미동맹· 성장 및 일자리 창출 기대 높고, 빈부격차· 사교육비 비관 높아
노사관계· 국민통합· 민주주의· 남북관계 전망도 미온적
3. 부록 주요 문항 교차표

조사개요

조사일시 : 12월 19일

표본크기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

표본추출 : 성, 연령, 지역 인구비례에 맞게 표본할당 후 무작위 추출 (가중치 부여)

표집오차 : 95%신뢰수준 $\pm 3.5\%$

응답율 : 13.8%

조사방법 : 전화조사(CATI)

조사기획 : 동아시아연구원(EAI: www.eai.or.kr)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 www.hrc.co.kr)



EAI 정기여론조사 연구팀

팀 장 이내영(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연구진 이숙중(EAI 원장, 성균관대 교수)
 전재성(EAI 아시아안보센터소장, 서울대 교수)
 서상민(EAI 연구기획국장)
 정원철(EAI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 내용문의

EAI 정한울 여론분석센터 부소장(02-2277-1683/018-280-3230/hwjeong@eai.or.kr)

EAI 정원철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02-2277-1683/017-279-4536/cwc@eai.or.kr)

□ 조사문의

한국리서치 김춘석 수석부장 (02-3014-0082/016-9525-8416/cskim@hrc.co.kr)



1. 전년대비 체감경제 바닥치고, 소득 계층별 인식 격차도 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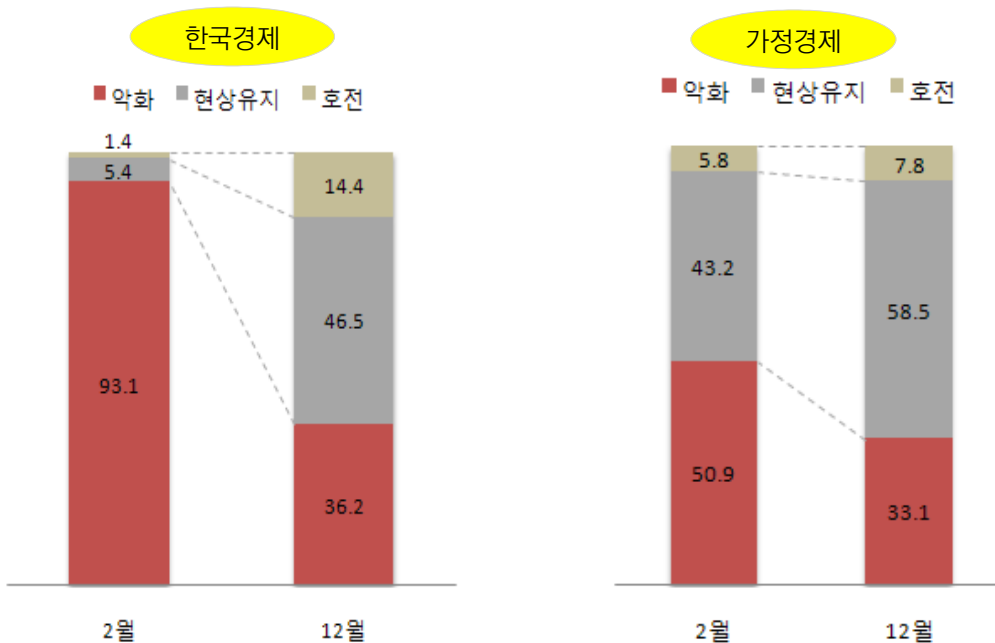
올 2월 비해 체감경제 부정평가 크게 줄어 가정경제보다 국가경제 인식 개선 두드러져
체감경제의 양극화 크게 줄고, 체감경제 개선 MB 지지율 떠 받쳐

EAI 여론분석센터_정한울· 정원철

체감경제 바닥 쳤다 : 올 2월 비해 체감경제 부정평가 크게 감소

국가경제 개선 폭 커 : 한국경제 “1년 전에 비해 악화” 93.1%(2월)→36.2%(12월) 급감
가정경제도 비관적 평가 줄어 : 가정경제 “1년 전 비해 악화” 50.9%(2월)→ 33.1%(12월)

[그림1] 1년 전 대비 가정경제 및 한국경제 평가 변화 : 2009년 2월과 12월(%)



주: 모름/무응답은 그림에 포함하지 않음. 한국경제 평가 문항의 경우 2월 조사에서는 모름/무응답이 0.1%였고 12월 조사에서는 2.9%였다. 가정경제 평가문항에서는 모름/무응답 비율이 2월 조사에서 0.1%, 12월 조사에서 0.5%였다. 2월 조사는 1,000명, 12월 조사는 800명 조사결과임

올 2월에 실시한 <EAI· 중앙일보 이명박 정부 1주년 평가 여론조사>와 12월 19일에 실시한 <EAI· 중앙선데이· 한국리서치 공동 12월 여론바로미터조사>를 비교하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최소한 바닥을 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가 크게 개선되었다. 올 2월 조사에서 ‘1년 전에 비해 한국경제가 어떻게 달라졌다고 평가하는지’ 물어 본 결과 무려 응답자의 93.1%(매우 나빠졌다 58.9%, 약간 나빠졌다 34.2%)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5.4%, ‘좋아졌다’는 응답은 1.4%(매우 좋아졌다 0.1%, 약간 좋아졌다 1.3%)에 그쳤다. 이번 12월 조사에서는 ‘나빠졌다’는 비관적 응답은 36.2%(매우 나빠졌다 8.3%, 약간 나빠졌다 27.9%)로 2월에 비해 무려 56.9%p 줄어들었다.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46.5%, ‘좋아졌다’는 응답은 14.4%(매우 좋아졌다 1.2%, 약간 좋아졌다 13.2%)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정부나 IMF, OECD 등의 국제기구가 발표하는 한국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이어지고, 국가경제 차원의 거시 지표들이 호전된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가정경제에 대한 체감도도 적지 않게 개선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올 2월 조사에서 ‘1년 전에 비해 가정 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50.9%(매우 나빠졌다 14.0%, 약간 나빠졌다 36.9%)였고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43.2%, ‘좋아졌다’는 응답은 5.8%(매우 좋아졌다 0.5%, 약간 좋아졌다 5.3%)에 불과했다. 12월 조사에서는 가정경제 역시 ‘1년 전에 비해 나빠졌다’는 응답이 33.1%(매우 나빠졌다 8.0%, 약간 나빠졌다 25.1%)로 크게 2월 조사에 비해 17.8%p 감소했다.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2월에 비해 늘어나 58.5%였고, ‘좋아졌다’는 응답은 7.8%(매우 좋아졌다 1.0%, 약간 좋아졌다 6.8%)에 그쳐 2월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가경제나 각 개별 가정경제에 대해 1년 전에 비해 좋아졌다는 평가는 여전히 소수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상황이 완전히 회복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국가 및 가계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10개월 전에 비해 감소하고 긍정평가가 늘고 있는 추세를 보면 최소한 체감경제가 바닥을 쳤다고 볼 수 있다.

소득계층별 경제 인식격차도 줄어, 저소득층 가정경제 비관 크게 줄어

10개월 새 “가정경제 악화” : 저소득층 27.2%p↓, 중간소득층 14.2%p↓, 고소득층 16.4%↓
한국경제 평가, 계층별 인식 고르게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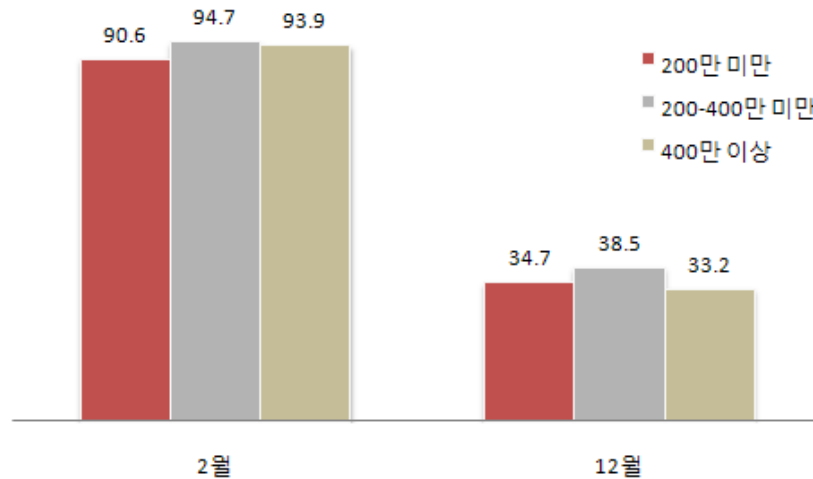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수준을 보여주는 소득계층별 경제 인식 격차가 줄어든 것도 중요한 소득이다. 보통 국가경제 보다는 개인과 가정의 경제생활 상태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가정경제에 대한 계층별 인식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글로벌 차원, 국가적 차원에서 발생한 경제 쇼크에 대한 반응은 전 계층적으로 고르게 나타날 수 있다. 반면 경제쇼크가 개별가정과 개인의 경제 상태에 미치는 파장은 정부정책이나 당사자의 경제력이나 인맥이나 신용과 같은 사회적 자산크기와 같은 개인적 특성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큰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가구 월소득 기준으로 나눈 계층집단별로 한국경제에 대한 응답을 비교해보면 지난 2월 조사나 12월 조사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2월 조사의 경우 1년 전에 비해 한



국경제가 악화되었다고 답한 비율만 비교해보면 월 가구소득 저소득층(월 200만원 미만)에서 90.6%, 중간소득계층(200~400만원 미만)에서 94.7%였고, 고소득층에서도 93.9%로 크게 나타났다. 12월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나빠졌다는 응답이 저소득층에서 34.7%, 중간소득에서 38.5%, 고소득층에서 33.2%로 동시에 개선되었다.

[그림2] 소득계층별 한국경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 비율 변화(2월~12월)
 “1년 전에 비해 한국경제 나빠졌다” 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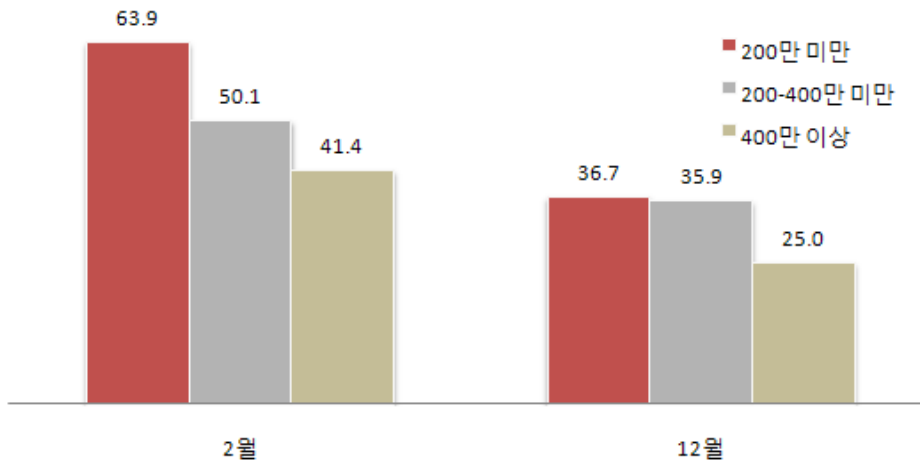
저소득층 가정경제 악화여론 급감, 중간소득 및 고소득층 악화여론 감소폭은 적어

반면 가정경제상황에 대해서는 계층별로 큰 인식격차에 큰 변화가 있었다. 2월 조사에서는 1년 전에 비해 가정경제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저소득층에서는 63.9%, 중간소득층에서는 50.1%였지만 고소득계층에서는 41.4%로 큰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경제쇼크가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저소득층에 더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12월 조사에서는 이러한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가정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2월 대비 27.2%p 감소한 36.7%였고, 월 가구소득 200~400만원 미만의 중간소득층에서도 전월대비 14.2%p 하락한 35.9%로 나타났다. 월소득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는 16.4%p 하락한 25.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도 저소득층일수록 가정경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지만 2월에 비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에 가정경제 상태를 바라보는 인식 격차는 크게 줄었다. 이는 지난해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이 추진되고 각종 저소득 지원정책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다. 반면 중간소득층이나 고소득층 역시 가정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 감소폭은 저소득층에 못 미쳤다. 정부가 추진한 ‘중산층 살리기’ 나 ‘감세’ 정책 등의 체감경제 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약했음을 시사한다.



[그림3] 소득별 가정경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 비율 변화(2월~12월)
 “1년 전에 비해 가정경제 나빠졌다” 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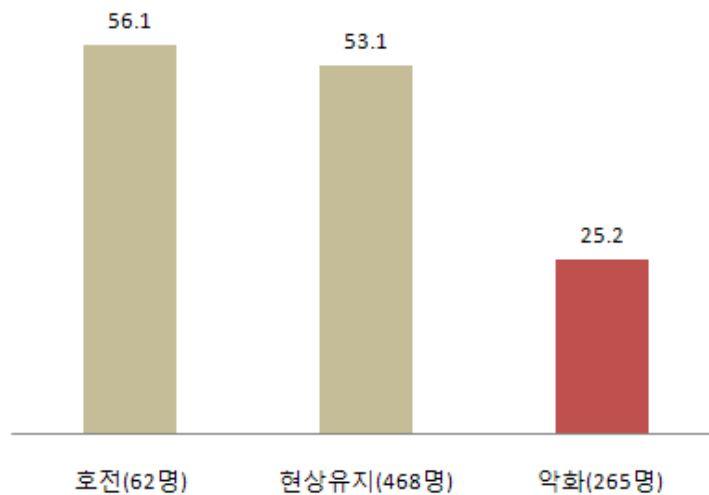


체감경제 개선, 대통령 지지 상승으로 이어져

가정경제 좋다고 볼수록 MB지지 : “개선층” 56.1%, “현상유지층” 53.1%, “악화층” 25.2%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가정경제인식 개선, MB 지지율 상승요인으로 작용

국민들의 체감경제인식의 개선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가정경제가 지난 1년 전에 비해 ‘좋아졌다’ 고 답한 62명 중 무려 56.2%가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한다고 답했고, ‘비슷하다’ 고 답한 468명 중에서는 53.1%에 달해 전체 평균 44.1%를 크게 상회했다. 그러나 ‘가정경제가 나빠졌다’ 고 답한 265명 중에서는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한다고 답한 응답이 25.2%에 불과해 지지율 평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림4] 가정경제 인식별 MB 국정 지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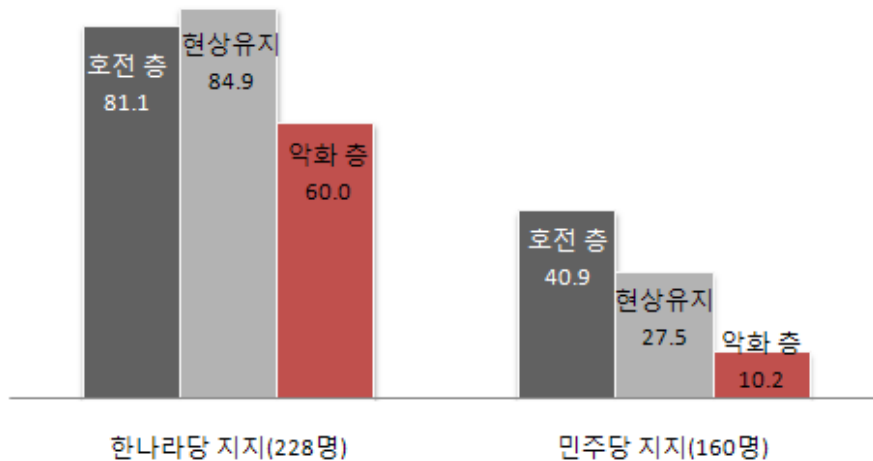


한나라당 지지층 중 가정경제 호전 시 MB지지 81.1%, 악화 시 60%
 민주당 지지층 중 가정경제 호전 시 MB 지지 40.9%, 악화 시 10.2%

이에 대해 가정경제상태를 좋게 보는 사람일수록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MB를 지지하고, 한나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가정경제를 좋다고 답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해보면 한나라당 지지층은 물론 반한나라당과 반MB 성향이 강한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가정경제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층은 그렇지 않은 응답층에 비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나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225명 중 가정경제가 좋아지거나 현상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층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각각 81.1%, 84.9%나 되지만, 가정경제가 나빠졌다고 답한 응답층에서는 60.0%로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여준다.

반대로 민주당 지지층 160명의 응답을 분석해보면 가정경제를 긍정적으로 응답한 층에서는 40.9%가 대통령의 국정지지를 밝혔고, 비슷하다는 현상유지 층에서는 27.5%로 떨어진다. 가정경제 상황이 나빠졌다고 보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국정 지지율은 10.2%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여야 정당지지는 정치적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가정경제상태가 대통령 평가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두 전 대통령 서거와 세종시 논란 등으로 하락하던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는 데에는 이러한 경제적 효과가 작용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림5] 한나라당 지지자 및 민주당 지지자의 가정경제인식별 MB지지율 비교(%)
 대통령 국정운영 “매우 잘함+대체로 잘함” 응답 비율





2. 2010년 전망 : 국가경제에 대한 기대감 크나, 각 분야 전망은 불투명

2009년, 올 한 해 우리사회 최대 화두는 경제위기 극복이었다. 가계는 물론 기업과 정부 모두 적지 않은 고통을 감수해야 했던 한 해였다. 그 결과 객관적인 거시경제지표 뿐 아니라 국가 및 가정경제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에서 비관론이 크게 줄면서 체감경제에서도 바닥은 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2010년 한국경제에 대해서는 올해 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가계경제에 대해서는 낙관적 전망은 여전히 높지 않아 거시경제의 호조가 가계경제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 자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경제에 대한 기대감과 대비된다.

특히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민생 분야의 구체적인 과제별로 국민들의 전망을 물어본 결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2010년의 모습은 여전히 밝지 않다. 상대적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과 ‘한미동맹 강화’ 에 대해 상대적으로 낙관적 전망이 높았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빈부격차’ 문제나 ‘사교육비 문제’ 에 대해서는 비관적 전망이 가장 높았다. ‘노사관계’, ‘국민통합’ 등의 사회통합의 과제 및 ‘민주주의의 성숙’ 과 같은 정치사회적 과제, ‘남북관계’ 등에 대한 국민들의 전망은 밝지 않았다.

결국 2010년 전반적으로 한국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지만, 각론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9년 사회구성원들의 고통과 노력을 통해 최악의 경제체감 상황에서 벗어난 것처럼 2010년에는 한국경제의 회복이 사회 각 분야에 희망과 낙관이 되살아나길 기대한다.

2009년 체감경제 개선되었지만, 2010년 경제 전망 여전히 낙관 못해

한국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 높지만, 가정경제에 대해서는 신중

2010년 1년 후 “한국경제 나아질 것” 40.5%, “가정경제 나아질 것” 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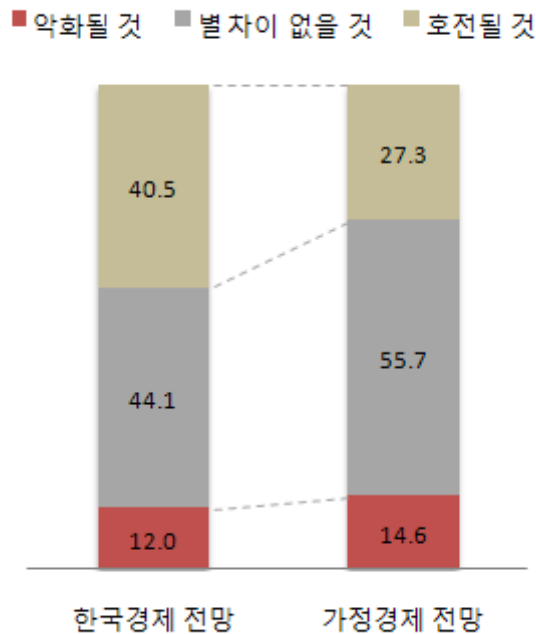
1년 후 경제 상태에 대한 전망에서는 국가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가정경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1년 후 한국경제 상황’ 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 이라는 응답이 40.5%(매우 좋아질 것 4.0%, 대체로 좋아질 것 36.5%), ‘별 차이 없을 것’ 44.1%였고, ‘나빠질 것’ 이라는 전망은 12.0%(매우 나빠질 것 2.2%, 대체로 나빠질 것 9.8%)에 그쳐 낙관적 전망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가정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 이라는 응답이 27.3%(매우 좋아질 것 3.2%, 대체로 좋아질 것 24.1%)에 그친 반면 ‘별 차이 없을 것’ 이라는 신중한 전망이 55.7%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나빠질 것’ 이라는 응답은 14.6%에 그쳐 비관적 전망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각종 경제지표의 청신호에도 불구하고 가정경제에 대한 신중한 평가가 많은 것은



여전히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대통령도 언급한 바와 같이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되었더라도 개인 및 가정경제로 연결되기까지 시간소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2] 2010년 경제전망



주: 한국경제전망 문항에 대한 모름/무응답 3.5%, 가정경제전망 문항 모름/무응답 2.4%는 표기하지 않음

8개 개별 국정과제별 2010년 전망, 분야별 편차 나타나

- 빈부격차· 사교육비 최대 불안 요인 “악화 우려”
- 노사관계· 민주주의· 국민통합· 남북관계 전망 “잘해야 현상유지”
- 한미관계· 경제성장/일자리 전망 “다소 개선”

EAI와 중앙선데이, 한국리서치는 한국경제 및 가정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전망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민생 분야를 포괄하는 8대 국정 전망 지표를 정하여 2010년 각각에 대해 국민들의 전망을 살펴보았다. 8대 국정과제 지표는 경제영역에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빈부격차해소’, 정치영역에서는 ‘민주주의 실현’을, 외교안보영역에서는 ‘한미관계’와 ‘남북관계 개선’, 사회영역에서는 ‘노사관계’ 및 ‘국민통합’, 민생영역에선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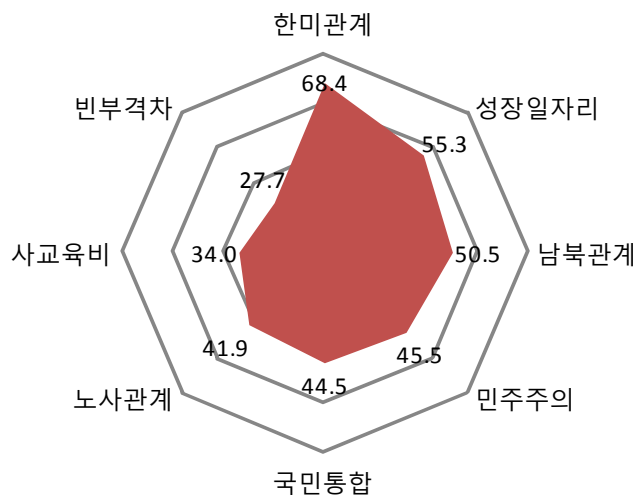
비교의 편의를 위해 “악화될 것”, “별 차이 없을 것”,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에 각각 각 0, 50,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균을 내보면 2010년 각 분야별 기대수준을 비교하면 우선, 한미관계에 대한 2010년 기대점수가 100점 만점에는 많이 못 미치지만 68.4점으로 가장 낙



관적 전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한미관계에 대한 전망이 55.3점으로 최소한 현상유지(50점) 수준은 넘어 다소라도 개선될 것으로 보는 편이다. 그러나 남북관계(50.5점)나 한국 민주주의(45.5점)와 같은 영역이나, 국민통합(44.5점), 노사관계(41.9점) 등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시급한 국정영역에 대해서는 50점 수준에 머물거나 이에 못 미치는 점수를 주어 잘해야 현상유지 정도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문제와 빈부격차 해소라는 과제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압도적으로 컸다. 사교육비 경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기대점수가 34.0점, 빈부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27.7점에 그쳐 국민들의 기대가 현상유지 수준에도 못 미치는 비관적 전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집권 시기부터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강조해온 ‘경제 살리기’와 ‘한미동맹의 강화’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전망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면, 정부 비판의 단골 메뉴인 ‘양극화 및 사회갈등의 심화’와 ‘민주주의의 약화’에 대한 우려를 국민들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이명박 정부는 한미관계를 안정화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도 빈부격차, 사교육비, 사회갈등, 남북관계에 갖고 있는 비관적이거나 불투명한 전망을 개선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최근 정부는 2010년 최우선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제기하면서 사회통합위원회를 신설하고,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1년 후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 지 귀추가 주목 된다.

[그림3] 8대 분야 2010년 전망 평균기대점수*
0점(악화될 것)~ 50점(현상유지) ~ 100점(호전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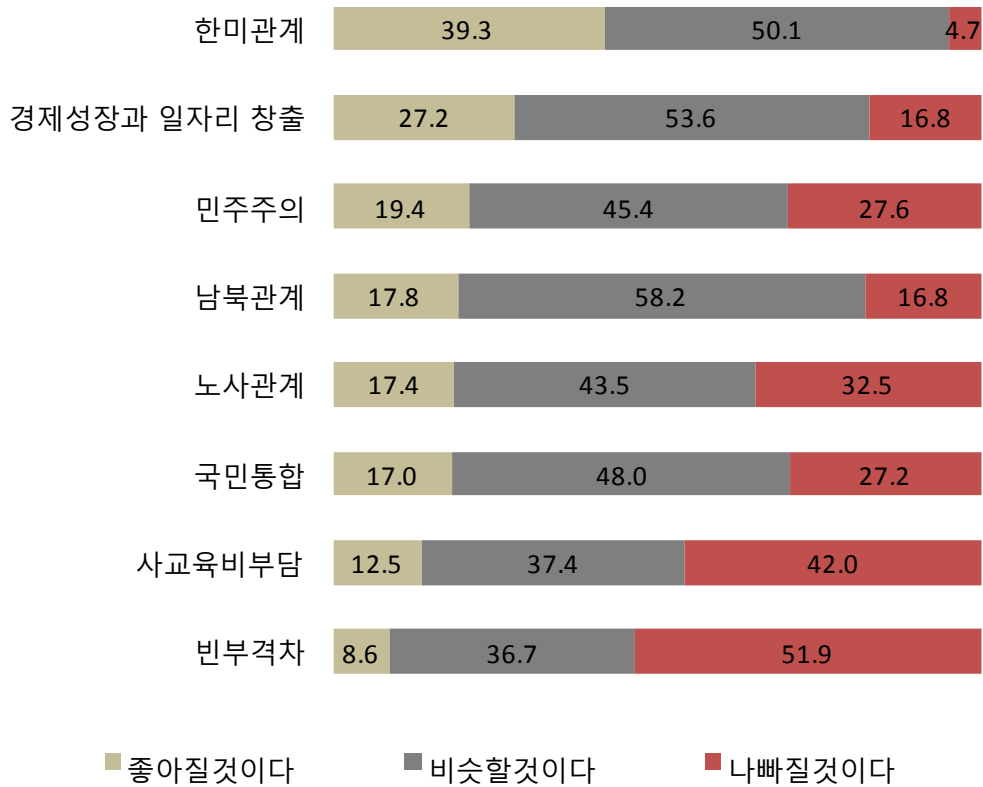


주: “악화될 것” 응답은 0점, “별 차이 없을 것”은 50점, “호전될 것” 응답은 100점으로 환산하여 전체 응답 평균을 낸 것. “모름/무응답”은 계산에서 제외함. 평균점수가 50점 미만으로 0에 가까울수록 악화될 것이라는 평균적으로 비관적 전망이 강하며, 50점에 가까울수록 현상유지, 50점 초과 100점에 가까울수록 호전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0년 분야별 전망에 대한 응답분포 분석

[그림4] 8개 분야별 2010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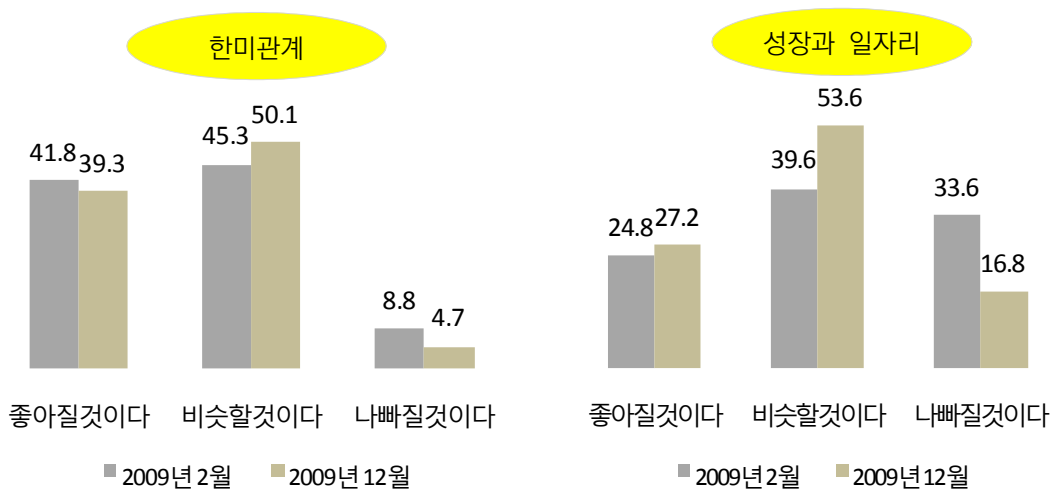
한미관계 “현상유지” 50.1%, “호전” 39.3%, 악화될 것 “4.7%” 2월과 비슷한 수준 유지

한미관계의 경우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50.1%로 가장 많았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 비율도 39.3%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나빠질 것이라는 대답은 4.7%에 그쳤다. 양국 정상들이 수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및 국제적 현안에 대해 두터운 공조를 보였고 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한미관계에 있어 일종의 안정감을 가지게 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미국은 한국의 G20 가입과 의장국 선임과 G20 정상회담의 한국 개최를 지원했으며 주한미군의 해외배치를 유보했다. 한국 역시 그 답례로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결정했으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적극적인 지지를 유지했다. 취임 2년차를 시작하던 2월 조사와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성장과 일자리 전망 다소 개선 “현상유지” 53.6%, “호전” 27.2%, “악화” 16.8%
2월 대비 비관적 전망 절반 줄어 “33.6%(2월)→ 16.8%(12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53.6%로 다수를 이루는 가운데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27.2%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비율 16.8% 많아 전체적으로는 최소한 현상유지 이상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 2월에 비해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민들의 비관적 전망이 많이 줄어든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2월 조사에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24.8%,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39.6%, 나빠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33.6%였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에서는 이번 조사와 차이가 없었지만(24.8%→27.2%) 이번 조사에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크게 줄고(33.6%→16.8%)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크게 늘었다(39.6%→53.6%).



남북관계 “현상유지” 58.2%, “호전” 17.8%, “악화”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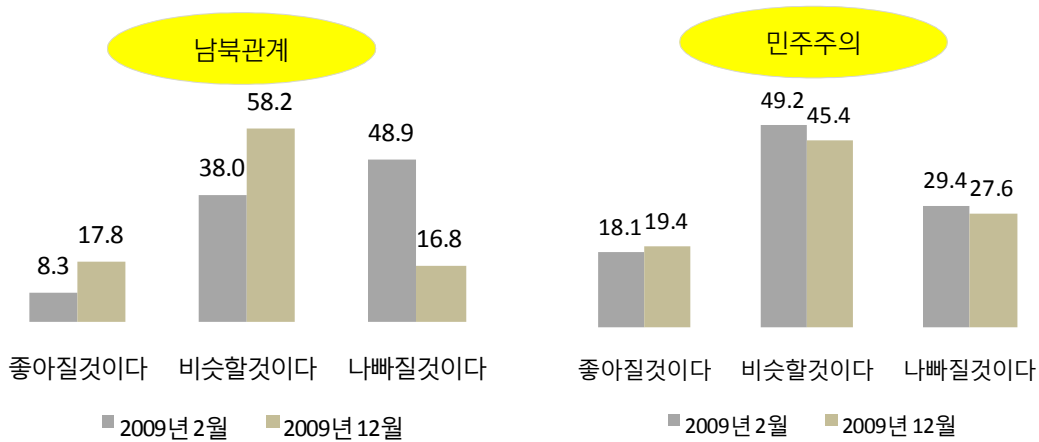
2009년 북핵 실험, 미사일발사, 서해교전 최악 상황, 오히려 비관 줄고, 낙관 늘어

2010년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17.8%였고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16.8%에 불과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58.2%로 압도적이었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월 조사 결과(8.3%)에 비해 9.5%p 상승한 결과다. 나빠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은 오히려 2월 조사의 48.9%보다 32.1%p 감소하고, 현상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2월 조사의 38.0%에 비해 20.2%p 상승했다. 비관적 여론이 줄고 현상유지 할 것이라는 반응과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 여론이 늘어난 것은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타미플루 지원 등 민간 지원 사업이 재개되는 정부간 남북교류가 기지개를 켜고 있는 우호적 상황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4월 북한 장거리 미사일실험, 6월 제2차 핵실험, 11월 제3차 서해교전 등 2009년 남북관계를 강타한 최악의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는 남북관계에 대한 냉소적 평가 역시 비관적 전망을 감소시킨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현상유지” 45.4%, “악화” 27.6%, “호전” 19.4%, 2월과 비슷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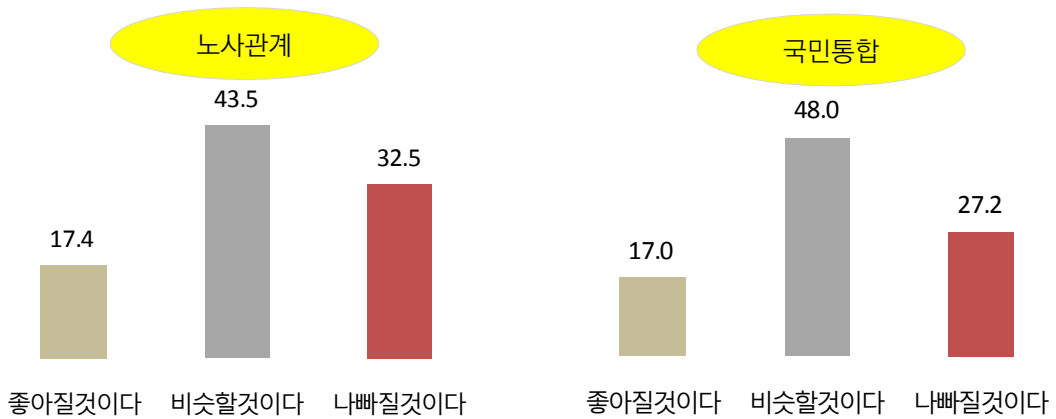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는 내년에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19.4%에 그쳤다.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과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은 각각 27.6%와 45.4%였다. 부정적인 전망이 긍정적인 전망보다 많아 올 해 정부와 정치권의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독선적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여론을 경험한 이명박 정부나 미디어법, 세종시, 4대강, 2010년 예산안 처리 등을 두고 타협 없는 충돌로 일관해 온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냉소와 무관심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개선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노사관계 “현상유지” 43.5%, “악화” 32.5%, “호전” 17.4%
 국민통합 “현상유지” 49.0%, “악화” 27.2%, “호전” 17.0%

내년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17.4%였다.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은 32.5%였고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도 43.5%로 높았다. 일부 노조들이 민주노총을 탈퇴하거나 현대자동차 등 일부사업장에서 무분규 임금단체협상 소식들이 전해지는 등 노동계 일부 변화가 감지되고는 있지만, 올해 쌍용자동차 사건, 공무원 노조 파동, 최근의 노사관계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및 노사간 힘겨루기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노사관계에 대한 미온적인 전망과 맥을 같이 하여 국민통합 영역 역시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17.0%에 불과하고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미온적 전망이 48.0%,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27.2%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정부에서는 사회통합위원회를 신설하고, 노사정 타협을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노사관계 및 사회갈등에 대한 국민들의 미온적인 반응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의와 실천을 이끌어 내는 것이 급선무로 보인다.



사교육비 “악화” 42.0%, “현상유지” 37.4%, “호전” 17.5%
 빈부격차 “악화” 51.9%. “현상유지” 36.7%, “호전” 8.6%

2010년 사교육비 경감 문제에 대한 전망을 물어본 결과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42.0%로 가장 많았고,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은 37.4%,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17.5%에 그쳤다. 최근 정부가 외고입시 개선, 야간 학원운영 금지 정책 등 사교육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의 비관적 전망을 되돌리기에는 버거워 보인다. 다만 빈부격차 문제에 대해 2월 조사에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63.7%나 되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11.8%p 감소하고,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도 28.8%에서 다소 늘어나 국민들의 전망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은 위안 삼을 수 있지만, 빈부격차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뿌리 깊게 유지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